

##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배경과 우리의 대응

정 영 태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북한에 대해 ‘대결선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대결은 곧 긴장 격화이며 그것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전쟁”이라 천명함으로써 ‘전쟁위협’ 선전선동 태세를 보였다. 현 정부 들어 북한의 이러한 대남 군사적 위협 행위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작년 3월 북한은 3차례의 해상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발사(3. 28)와 함께 해군사령부 대변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경고하였다.

4월에는 북한이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전화통지문(4. 3)을 통해 남측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였고,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예상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북측 해군사령부의 위협 보도를 내놓았다. 5월에는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군사 논평원의 전쟁위협 발언(5. 8)이 나왔으며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이 또 발사(5. 30)되었다.

6월에는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6. 22)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위기 조성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북한 군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개월도 채 못 되어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7. 11)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인원 모두 추방”이라는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가 나오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군에 의한 이러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조장은 9월 이후에도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북한의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10. 7) 이틀 후 북한은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이라는 주장을 담은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10. 9)를 내놓았다. 또한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는 우리 민간인의 대북 “빠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이라는 강한 군사적 경고(10. 28)를 하고 나섰다.

이에 더하여 11월부터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이 직접 개성공단 현황 점검(11. 6)을 실시하면서 개성공단의 존재위기 위협을 가했다. 실제로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을 담은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전화통지문(11. 12)에 이어서 12월 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상주인원 및 차량 선별 추방 내용을 담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의 통보(11. 24)가 이어졌다.

이번 남측에 대한 ‘전면 대결태세 진입’이라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강경성명은 올해에도 여전

히 북한 당국이 군사적 위협을 통한 긴장조성으로 효율적인 대내 체제단속에 초점을 두면서 남북관계 및 대미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시에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전쟁 지휘부'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내용으로 한 TV 성명을 내놓은 것은 대내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전쟁위기 분위기를 창출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대내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라는 명분하에 주민동원을 통한 주민통제 및 결속 강화로 체제안정화를 기하는 데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북한 당국은 김정일 건강 이상 소문 확산에 따른 정치·사회적 일탈현상 즉, 지도부 내 권력투쟁 가능성 및 주민동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직면했을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시위 또는 위협은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전면 이행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위적인 행위일 가능성도 크다. 군사적 긴장조성(서해해상 미사일 시험발사 등)→ 남한사회 불안심리 조성→ 대 이명박 정부 부정적 여론 확산→ 정책변화 유도 추구하고 같이 일종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한 정책변화 유도 술책인 셈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20일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인위적인 술책의 하나일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내외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한 정책이 미국의 2차적인 관심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의 무관심으로 그들 '핵카드'의 협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북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통해 이러한 전략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최악의 경우 서해해상의 군사적 충돌 이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서해해상 군사적 충돌 역시 북한은 적잖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해상 군사장비 차원에서 북한군은 남한 해군의 그것을 능가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기습적 해상공세를 펴게 된다면 북한은 또 다시 국제적으로 '호전세력'의 낙인을 회피하기도 어렵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 앞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부정적 인식을 자극하게 됨으로써 북·미 간 직접협상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남차원에 있어서도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은 남한의 대북여론을 더욱 더 부정적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 진전이 그들 체제의 안정을 가져오기보다 해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은 대내외적 선전선동 차원에서 '위협을 위한 위협'행위 조치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이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파장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TV, 라디오를 포함한 북한의 언론매체는 기본적으로 대내적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전달하거나 분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성이 요구된다.

